말뿐인 재정 조기집행…현장은 돈가뭄

국고 찔끔 지원…경기부양 '헛구호'

재정 열악한 자치단체 자금 집행 못해

광주시·전남도 토지매수 간소화 건의

"정부 예산이 찔끔찔끔 내려오는데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가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투입할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해 지자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전체 지방예산의 32.5%인 63조3천억원을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광주시에 내려보낸 예산은 1천279억원에 불과하다.

광주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 잡은 1조7천82억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다. 재원의 절반 가량인 9천여억원 가량이 국고 지원액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매일 같이 중앙 정부에 재원 조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재정 집행절차의 난맥상=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국비 지원을 받는 대형 사업들이 많다. 전남도의 경우 조기 집행 예산 중 80%가 국고 보조금이다.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국고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출을 못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비 50%, 지방비 50%가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더라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상 자금 집행이 힘들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협의기간 등을 단축하고 일반입찰로 추진되던 사업을 긴급 입찰로 전환해 공고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국비가 빨리 내려오지 않고 있다"면서 "국고 지원을 빨리 해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전남도 제도개선 건의=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정부에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로는 재정 조기집행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조기 집행 효과가 큰 대규모 공사 추진에 있어 사업 대상지의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매수절차 등 손실보상 일정을 간소화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원소유자와 협의매수, 강제 집행결정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까지 무려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의 매수협상기간(2개월)을 대폭 단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결정토록 요청했다.

정부의 대형 공모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정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u-City 시범사업', '대학지원 'R&D사업', '산업 원천 기술개발과제' 등 사업들은 시행시기가 불투명하거나, 올 하반기에 착수될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정부가 공모사업의 표준모델과 매뉴얼을 서둘러 제정해 사업시행을 앞당겨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또는 국고보조금이 300억 이상인 사업 중 특정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상 사업은 ▲국가 정책적인 사업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지급 등 단순 소득보전 사업 ▲초, 중등 교육시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큰 사업들이 조기 시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정부가 정책 목표를 조기 가시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J프로젝트, 국토해양부 심의위 상정

심의 요청 1년 4개월만에 행정절차 시작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22일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에 상정됐다. J프로젝트가 중도위에 상정된 것은 전남도가 처음 심의를 요청한 지 1년 4개월 만으로, 정부의 정식 행정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전남도에 따르면 중도위는 이날 전남도가 신청한 J프로젝트 개발예정지구 중 2곳인 삼호(9.2㎢)·구성(21.8㎢)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전남도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해 왔으나, 농림부가 사업대상 부지인 간척지의 양도양수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중도위 심의가 보류돼왔다.

중도위는 전남도의 개발계획을 검토한 뒤 다음달 초 중도위 소위원회가 J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사업예정지구를 둘러볼 계획이다.

전남도는 개발계획 승인신청 대상지역을 정부 요구대로 일단 기업도시 시범지구인 삼호·구성지구로 축소했으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남도를 방문해 J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힌 만큼 중도위 심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영종 전남도 투자정책국장은 "지금까지 늦춰졌던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중도위에 상정돼 앞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음달 열리는 중도위 2차 회의에서 개발계획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국방차관 장수만 농림1차관 민승규

차관(급) 6명 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방부 차관에 장수만 조달청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에 민승규 청와대 농수산식품비서관, 2차관에 하영제 산림청장, 조달청장에 권태균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농촌진흥청장에 김재수 농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산림청장에 정광수 산림청 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차관급 인선은 측근과 전문가를 적절히 배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국정 전반에 전파하기 위해 주요 자리에 '복심'들을 전진배치한 동시에 조직 안정을 위해 내부 전문가를 대거 발탁시킨 것이다.

우선 이번에 새로 기용된 21명 가운데 청와대 전.현직 출신 측근은 5명이다. 수치상으로 4분의 1 가량 되는 셈이다.

1기 청와대 참모진에 몸담았던 '왕비서관'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새 정부 교육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각각 기용됐다.

이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또 민승규 농수산비서관은 농수산식품부 제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동욱기자 tuim@

"정부 공급 집값 낮추고 실업자 꼼꼼히 챙겨야"

李대통령 벙커 비상경제대책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부가 서민주택을 공급할 때는 철근 등 원자재 가격 하락요인을 반영해 평당 가격을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지하별관(지하벙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비상시기인 만큼 서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대책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불안과 관련, "실직자 중에서도 중소기업 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야말로 요즘처럼 어려울 때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라면서 "정부가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민생안정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경제난으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 빈곤층 주거지원 차원에서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매입분 등 주공에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2천채 가운데 다음달부터 우선 500채를 시범 공급해 임시 주거시설로 제공키로 결정했다. 또, 필요할 경우 1천500채를 신 빈곤층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승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모두 1천2개로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장관회의 정례화, 규제개혁 현장점검 강화 등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신임 차관(급) 프로필

장수만 국방차관

공직 대부분을 경제부처에서 보낸 정통 경제전문가다. 일류국가비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747'로 대변되는 MB노믹스의 얼개를 만들었다. ▲부산(59) ▲경남고, 고려대 경제학과 ▲원호처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과장, 조정1과장 ▲조달청장

민승규 농림 1차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한 민간 농업 전문가. 일찍부터 '돈 버는 농업' 등 농업의 산업화를 지론으로 펼쳐왔다. ▲서울(48) ▲동국대 농업경제학과졸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부위원장 ▲대통령 농수산식품비서관

하영제 농림 2차관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행정전문가. 2002년 민선3기 경남 남해군수로 당선된 뒤 2006년 민선4기에 재선됐다. ▲경남 남해(55) ▲내무부 행정계장·여론관리계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산림청장

김재수 농진청장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장 등을 거친 농정 전문가. 작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농정을 조율해왔다. ▲ 경북 영양(52) ▲경북고-경북대 경제학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권태균 조달청장

정부의 대외경제정책분야에서 금융과 실물을 두루 섭렵한 국제통. 행정고시 21회로 재무부에 들어온 뒤 국제금융 등 대외분야업무를 오래 맡아왔다. ▲전북 전주(53) ▲경기고.서울대 경영학과 ▲경제부총리 비서실장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정광수 산림청장

1979년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30년 가까이 산림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업전문가. 업무추진력과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 춘천(56) ▲산림청 임업연수원장 ▲산림청 임업정책국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청 차장